

우크라 파병 북한군 3명 중 1명 ‘귀가하지 못했다’

영국 국방부 “병력 절반 5천명 사상…3분의 1 전사 가능성”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 탓…현대전 대비 안된 것 보여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테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자 국방 정보 업데이트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께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10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이 증원 개입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대규모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이 잘 훈련된 가공할 만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테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작년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300㎞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만 지키고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북한군의 추가 진격이 국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모르나 만큼 양국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내셔널인테레스트는 “북한군의 쿠르스크군 배치 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美 민주당의원 ‘무박2일’ 트럼프 비판 발언 ‘신기록’

트럼프 비판 노벨상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은 美 비자 취소

코리 부커(55·뉴저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상원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무박 2일’ 동안 비판하면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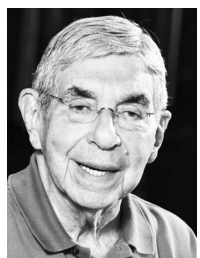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그는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법치주의, 헌법, 미국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상원 본회의에서 발언을 예고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에 발언대에 올랐다.

그는 만 하루가 넘도록 발언을 이어갔고, 1일 오후 7시19분을 넘기며 1957년 스트롬 서먼드 당시 상원의원이 세운 24시간 18분의 종전 상원 최장 발언 기록을 깼다.

동료 의원이 기록 경신 사실을 알리자 상원 회의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부커 의원은 잠시 이마의 땀을 닦은 뒤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31일 연설을 시작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때까지 정상적인 상원의 업무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후 의료, 교육, 이민, 국가 안보 등의 주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지역구 및 일반 시민의 편지, 언론 보도, 유명 연설문 등도 이 자리에서 읽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부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언자인 부커 의원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는 단상에서 발언을 멈추면서 일종의 휴식을 취했을 뿐 발언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오스카르 아리아스(84·사진)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미국 비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산호세에 있는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불행히도 독재 정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TV 노시타리아 레프레텔이 보도했다.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1980년대 내전으로 혼란한 중미 문제 해법으로 ‘군사력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던 미국 등 열강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역대 평화 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러시아 구조대가 30일 미얀마 만달레이의 스카이 빌라에서 희생자를 수색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28일 규모 7.7 지진으로 16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 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얀마 지진 닷새째 사망자 3000명 육박

2719명…부상·실종 5000여명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를 덮친지 닷새째인 1일(현지시간) 지진으로 인한 미얀마 내 사망자가 수가 3000명에 육박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미얀마 사망자가 2719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TV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는 부상자와 실종자가 각각 4521명, 441명이며 사망자는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 진영 임시정부 격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는 이날 별도 발표에서 이번 지진으로 2400명 이상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NUG는 이어 “850만명 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유엔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NUG는 “지진 이후에도 긴급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방해하는 군정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비극이 악화하고 있다”며 “미얀마 국민들은 즉각 지원이 절실하며 국제사회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 구조대가 수도 네피도와 제2 도시 만달레이에 일부 도착했지만 다른 피해 지역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모든 구호단체가 군정이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대피소와 깨끗한 물, 의약품이 부족으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OCHA는 만달레이에서 지진 당시 유치원이 무너져 아동 50명과 교사 2명이 숨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72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간히 극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 오전 네피도에서 건물 잔해에 묻혀있던 63세 여성이 지진 발생 91시간 만에 구출됐다고 당국이 밝혔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28일 중부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美에 치이고 유럽에 치이고

EU ‘폐차 담합’ 과징금 191억원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명이 다한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낀 목적으로 장기간 담합을 한 자동차 제조사 15개 업체에 총 4억 5800만 유로(약 728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1195만 유로(약 191억원)를 부과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유럽 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2017년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폐차 재활용 관련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 간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처리업체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재활용률만 지키면 된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에 연루된 자동차 대수와 기간 등이 고려돼 제조사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모든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인정해 10%씩 과징금이 일괄 감면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 기 군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